

광일춘추



서지문 고려대학교수·영문학

나의 잇속, 우리의 이익

고려가 대외무역을 금지한 이유는 태조 왕건이 자신이 해상무역으로 국가무대에 등장할 재력을 구축한 사람이고, 그 이전에 장보고가 해상무역으로 막강한 실력자가 되어 본국인 신라의 왕권을 위협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권에 도전할만한 세력의 형성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진한 저 '고려시대 송상왕래(宋商往來) 연구' 참조)

물론, 나라를 건국한 자의 첫 번째 정권은 튼튼히 하고, 정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일 터이니 놀라거나 비난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또 선정에 힘쓰는 정권이라면 정권의 안정은 권력자뿐 아니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발전과 부강의 씨를 잘라낸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하기야 왕건이 (그것이 그가 남긴 유훈이 아니라)는 주장을 믿고 싶은 '후요십조'에서 차령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현 호남지방) 사람들이 역신을 풀을가 두려우니 등을 하지 말라고까지 했다면 고려왕조에서 코스모폴리탄 마인드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假定)은 의미가 없었지만

만약 고려가 자국상인들의 해외진출을 허용했다면 고려는 한층 더 발전하고 부강했으며,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Corea' 또는 'Korea'가 세계인의 의식 속에 일찌감치 각인되었을 것이다.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근대에 일찍이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거의 모두 대외무역으로 부강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항로 개척과 항해술의 발달은 국가, 왕실이 직접 지휘하고 후원했다.

대항해시대를 연 베니스의 통치자(doge)들, 포르투갈의 '항해왕자' 엔리케, 스페인의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 등... 그들의 후원과 독려의 힘으로 벌어들인 부(富)와 확대된 인식지평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었다.

고려 왕실이 대외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힘을 활용했다더라면 제국이 강해져서 무신정권의 허수아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국민의 지적 지평이 넓어져서 역참적이고 폐쇄적인 유교 국가의 건립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쇠국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이웃 나라와

의 마찰로 국력 소모도 많았고 피해와 굴욕도 많았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생존한 것이 결국 유럽을 오늘날의 유럽으로 만들었다.

내 잇속을 차리고 내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행동이 결국은 나를 약하게 해서 외부의 공격이나 모함애 무너지게 만드는 일 이 얼마나 흔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정당들의 행태는 내부적으로는 계파의 이익을 챙기느라 국민이 염두에도 없는 것은 물론 당의 분해조차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상대 당을 흠집 내고 지지자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된 주장, 무리한 공약도 서슴지 않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것도 삼가지 않았다. 나라의 백년대계 같은 것은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 같았다.

우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나의 잇속만을 목표로 하고 주변에 돌아 갈 악영향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곧바로, 또는 한 바퀴 돌아서 나에게 재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경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잇속과 모두의 이익이 상충할 때 후자를 우위에 두고 나의 성심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기고

박근혜 정부의 호남정책과 호남인의 자세



김왕복 조선이공대학교 총장·행정학박사

는 속설이 깨졌다.

물론, 속칭 긴 세대도 불리는 50대가 기록적인 89.9%의 투표율로 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다. 노부모도 부양해 왔지만 청년 백수 자녀를 아직도 돌보고 있는 하우스푸어 50대 가자들은 젊은 세대가 원하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보다 사회안정화를 선택하였다.

셋째,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중 35%가 박 후보에게 투표하는 등 진보세력의 과격함과 참여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실망이 시계주의 진자 현상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호남 지역 유권자들은 전국적 현상과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였다. 세대 또는 계층에 따라 이념과 가치가 투영된 지지의사를 밝히기보다는 무조건 '누구는 안 된다' 식의 투표 성향을 보인 것이다. 사실 호남의 서운함과 박탈감은 박정희 시대부터 씩 터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보다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산업개발 정책은 호남을 공동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실증적으로 호남 인구비율은 해방 이전 전국에서 약 18.4%를 차지해 영남의 22.6%와 약간 차이나는 수준이었으나 2010년 기준 호남 10.3%, 영남 26.1%로 그 격차가

2.5배 이상으로 벌어진 데서 심한 지역 간 불균형을 느낄 수 있다.

인구이동 현상이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때 인구수를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앙 정부의 인재 등용도 대표관료제 원리에 따라 대체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문제가 발생해는 것이다.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민주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당면 과제는 박정희 시대부터 소외돼 온 호남을 포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힐링하는 것이다. 7월 출범한 인신위원회가 위원 인선 기준으로 정치보다는 정책에 방점을 두었다고 발표한 만큼 인신위원회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지역균형발전과 탕평인사에 두어야 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일관되게 취해 왔던 효율성과 무한경쟁 위주의 시장경제원리를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1993년 문민정부 시절에 공식 발표된 호남고속철 호남 인구비율은 해방 이전 전국에서 약 18.4%를 차지해 영남의 22.6%와 약간 차이나는 수준이었으나 2010년 기준 호남 10.3%, 영남 26.1%로 그 격차가

새운 충청권의 노선 조정 요구가 있다고 해서 또다시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 수요를 감안한 투자 결정보다는 투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해 가는 것이 지역균형발전 정신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대학에 대한 평가와 재정지원 방식도 손보아야 한다. 지역적으로 인구와 산업체 수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을 기득권화 한 평가기준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지역에 따라 여건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을 등으로 전국 대학을 서열화하여 평가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신과 맞지 않다.

그럼 호남인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인가? 무조건 누굴 배척하는 투표 행태는 고쳐야 한다. 정치권도 많이 투명해 졌고 정책선거 운동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계층별 세대별로 정책 선호도에 따라 시계주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다음 선거부터는 어느 당 어느 후보에 몰표를 주기보다는 실적과 미래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한층 수준 높은 호남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네팔에서 온 편지



박행선 파탄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파탄의대의 위기

었다. 대학과 병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제자문위원들은 신임 부총장의 리더십과 함께 비전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해 했다. 파탄의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특색 있는 교육과 교육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대학이 추구하는 미션과 가치가 존중될 것인지 염려했다.

네팔에서 대부분의 교육기관들은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우선 입학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장학금 수혜자를 대폭 줄일 뿐만 아니라 PBL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부총장에게서 여성 특유의 화합과 인화는 찾아볼 수 없고 대화와 소통 기술이 부족하거나 아예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취임 한 달 후에는 그녀의 전 대학 동료 여교수를 렉터로 초빙하였다. 대학의 설립 이념을 무시하고 내부의

유능한 인물들을 배제한 채 만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10월 중순에 시작된 신임 렉터 반대 서명은 결국 부총장과 렉터의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다. 의료진들은 매일 1시간씩 외래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교직원들의 부총장실 항의 방문이 빈번해졌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부총장과 렉터의 집무실을 폐쇄하려고 불려갔다.

위기를 느낀 부총장은 경찰을 학내로 불러 들였다. 학생들의 집무실 폐쇄를 막으려 경찰은 학생들에게 곤봉을 휘둘렀고 이는 더 이상 학내 문제가 아니었다. 모든 신문, 방송과 TV에서 이 대학의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양쪽 다 투쟁 의지가 분명하였다. 부총장

은 자신은 합법적으로 임명되었고 부총장직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항변한다. 세 직원 조합 중 한 단체가 부총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행정과 경영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위협받는 것이 그녀로서는 억울한 것 같았다.

의료진과 교직원 400여 명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조를 짜서 집무실 출입문을 봉쇄한 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나는 이 대학의 학내 분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대학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며 대학의 수장을 정부가 아니라 자신들이 선출하겠다는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허술한 소방법이 부른 광주기도원 참사

광주시 북구 오치동 H기도원에서 14일 오전 9시 50분께 폭발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나모(53·여)씨 등 4명이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사망자들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기도원 지하에서 이날 오후 두 차례 예정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 '펑'하는 굉음과 함께 지하에서 치솟은 화염은 순식간에 지하 전체로 번졌으며, 사망자 4명은 거실에 1명, 주방 2명, 통로에 1명 질식사 숨져 있었다고 한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연기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지하층으로 진입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화재 현장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각종 파편과 벽돌 조각이 나뒹굴고 있었고, 유관함은 화염을 이기지 못해 찌그러지듯이 녹아 있어 당시 폭발과 화재의 충격을 여실히 보여줬다. 경찰은 플라스틱 등의 방음소재에서 나온 휘발성 유증기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참사 역시 당국의 소방법 미비에 의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다. 기도원은 일반적인 교회와는 달리 질병 치유나 영적 수양 등의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장소로, 다중이 속식을 하며 장기간 머무르는 곳이다. 그런데도 이 기도원은 소방설비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한다.

통상 1000㎡ 이상의 종교시설은 스프링클러 등 자동 진화설비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기도원은 132㎡의 소규모로서 종교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돼 별다른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건물은 소방안전점검 의무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 이용하는 기도원에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가 이토록 허술하다니 그야말로 예견된 참사나 다를 바 없다. 소방당국은 소방법 개정을 서둘러 기도원 등에 대한 소방시설과 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 언제까지 후진국형 인재를 당해야 하는가.

박 당선인 지역공약 실현 로드맵 서둘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광주·전남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이 '신뢰'의 정치를 강조한 터라 기대감이 높지만 일부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안돼 있고,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안도 아직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법·제정이 선행돼야 할 공약은 광주 '탄소 중립 친환경도시 조성'과 전남의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관광과제도시 건설' 등이다. 탄소 중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자급의 지원 및 조세 감면 등 관련법의 제약을 벗어나는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도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지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순천만이 관광특구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여수, 순천을 쪼개는 '반쪽'짜리 특구가 될 수 있어서다. 땅 문제로 정부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J프로젝트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다.

예산 확보는 더욱 시급한 과제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건설의 경우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야 한다. 부지가 있어야 공장을 짓고, 부품업체들이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가 올 부지매입비로 500억 원의 국비 예산을 요청했으나 전혀 삭감됐다니 우려가 크다. 광주~완도간 4차선 고속도로 사업과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등 사업은 아직 기본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챙기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 전남도는 당선인의 공약사업 추진과 이행을 위해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지금부터 법 제·개정과 국고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점을 파악한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지역발전 관련 공약이 헛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것만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無等鼓 프로야구 10구단 2015 시즌 개막전 경기장 KIA 타이거즈를 목청껏 응원하거나 맥주집에서 TV 중계를 보며 야구를 만끽하는 것은 서민들의 소소한 즐거움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야구를 관람하다 인생진로를 바꾼 이도 있다.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대학시절 글 쓰는 일을 하게 될 줄 상상조차 못했다. 하지만 나 이 서른 무렵 프로야구를 관전하던 중 2루타가 터지는 것을 보는 순간 소설을

Table with 4 columns: Position (사장, 발행, 편집, 논설주간), Name (金汝松, 申港樂, 奇賢鎭), and other details like phone numbers and website.